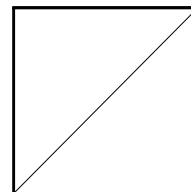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80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4. 24. (제 8 차)	

(주)오리엔트전자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4. 4. 24.

1. 의결주문

(주)오리엔트전자의 제25기('15.1.1.~'15.12.31.)부터 제32기('22.1.1.~'22.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오리엔트전자의 제25기('15.1.1.~'15.12.31.)부터 제32기('22.1.1.~'22.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오리엔트전자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20년 1,681백만원, '21년 1,681백만원, '22년 1,681백만원]○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15년 2,582백만원, '16년 4,500백만원, '17년 5,043백만원, '18년 △5,043백만원]○ 장·단기대여금 과대계상 ['19년 441백만원]○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15년 8,884백만원, '16년 9,017백만원, '17년 5,472백만원]○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19년 773백만원]
조치 내용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4 (회사 90백만원, 대표이사 ★★★ 3백만원)○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5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높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 중과실 및 과실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 과실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 과실

장·단기대여금 과대계상 : 과실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 과실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가중 : '19년~'22년 1단계 가중

회사는 '19.6.19.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과실 조치를 받았으므로, '20.3.27. 공시된 '19년도 사업보고서부터 '22년 사업보고서에 해당하는 기본조치를 1단계 가중

※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가.2]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舊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가.2]

○ 감경(①+②) : '15년~'22년('19년 제외) 1단계, '19년 3단계 감경

①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인지('23.2.10.)하기 전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20년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통해 수정·공시('21.3.29.)하였으므로 2단계 감경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가.4]

② 회사의 '15년~'22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1,000억 미만이므로 제25기부터 제32기의 기본조치에서 1단계 감경

※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 미만인 경우[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가.1])

*4 과징금 산정내역

○ 자본시장법 과징금 : 회사 90백만원

○ 외부감사법 과징금 : 회사 30.2백만원, 대표이사 ★★★ 3백만원

※ 조치근거 :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3항 제1호 및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외부감사법」 제35조(과징금) 제1항 및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5 시정요구 : 회사가 일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하지 않아 시정요구 조치를 부과

※ 감사(비상근) ㉠㉠㉠는 분식회계를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반동기를 ‘과실’로 판단하고 조치를 생략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I.다.]

나. OO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15년 2,582백만원, ‘16년 4,500백만원, ‘17년 5,043백만원, ‘18년 △5,043백만원] ○ 장·단기대여금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 441백만원] ○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절차 소홀 [‘15년 8,884백만원, ‘16년 9,017백만원, ‘17년 5,472백만원]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9년 773백만원]
조치 내용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회계법인(과실 Ⅲ^{*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지정제외점수 10점 ○ 공인회계사 ◇◇◇(과실 Ⅱ→Ⅲ^{*3})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직무연수 6시간 ○ 공인회계사 ◆◆◆(과실 Ⅳ^{*3*4}) [계정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 수준보다 높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과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과실

장·단기대여금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과실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과실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가중 : '19년 1단계 가중

- 공인회계사 ◇◇◇은 '19.6.19.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실 조치를 받았으므로, '20.3.27. 공시된 '19년 사업보고서에 해당하는 기본조치를 1단계 가중

※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가.2]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舊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가.2)]

-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나.1]

○ 감경(①+②) : '15년~'18년 1단계, '19년 3단계 감경

- ① 회사의 감리기간 내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1,000억 미만이므로 제25기부터 제29기 기본조치에서 1단계 감경

※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 미만인 경우[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가.1)]

- ② 감사인은 회사가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감리착수('23.2.10.) 전 이미 수정·공시('21.3.29.)하도록 조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2단계 감경 [新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VI.3.나.5)]

*4 보조책임자로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하므로 추가로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5 조치근거

- OO회계법인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3항
- 공인회계사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4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4항

4. 참고사항

가. 제5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4. 3. 21.)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별지1)

(주)오리엔트전자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오리엔트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오리엔트전자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0789169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37621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22

☐ ★★★ (주)오리엔트전자 대표이사)

- 생년월일 : '61.3.16.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 156-9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에 의하여,

- (주)오리엔트전자에 대하여 과징금 90,000,000원을 부과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의하여,

- 대표이사 ★★★에 대하여 과징금 3,000,000원을 부과한다.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1항, 제27조 및 부칙 (제2019-13호) 제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 (주)오리엔트전자는 2025회계연도(2025.1.1.~2025.12.31.)부터 2026회계연도(2026.1.1.~2026.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오리엔트전자는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오리엔트전자(이하 '회사')는 제25기('15.1.1.~'15.12.31.)부터 제32기('22.1.1.~'22.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20년 1,681백만원, '21년 1,681백만원, '22년 1,681백만원)
 - 회사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회사의 경제적 자원이 이전될 의무가 없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소급하여 일시에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과대계상
('15년 2,582백만원, '16년 4,500백만원, '17년 5,043백만원, '18년 △5,043백만원)
 - '15년도부터 회사는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크게 미달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다가 '18년도에 일시에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장·단기대여금 과대계상('19년 441백만원)
 - 장·단기대여금의 공정가치 평가 시 차입자인 (주)오리엔트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하여 장·단기대여금의 공정가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15년 8,884백만원, ‘16년 9,017백만원, ‘17년 5,472백만원)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주)오리엔트시계(대상연도 : ‘15년~‘17년) 및 (주)오리엔트비나(대상연도 : ‘15년~‘16년)를 종속회사로 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19년 773백만원)**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인 (주)오리엔트시계를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평가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175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②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③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④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379조

- 증선위는 회사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증권시장에서 거래금액의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2.12, 4.26, 4.27, 4.31, 4.39

-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후략)
-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 (2)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 (3)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한다. (후략)
-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되며, (중략) 경영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의제의무'라고 불린다.
-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의무는 다음의 예를 포함한다.
 - (1) 현금을 지급할 의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5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8, 9, 12, 18, 59, 60

-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 외부정보원천
 -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4)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 내부정보원천
 - (5)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6)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희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 (7)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에서는 회수가능액의 측정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1.1, B5.1.1, 2

-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예: 비슷한 대여금의 시장이자율이 8%일 때 5%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미리 수수료를 받는다면, 대여금은 공정가치(수취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순액)로 인식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문단 9, 60, B4

-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거래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1) 그러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한 거래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표시 문단 14

-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4

-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4(1)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 (1)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2) 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3) 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4)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19, B86

-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연결재무제표는:
 - (1) 지배기업과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 별로 합산한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 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별지2)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114634-0038176
- 사업자등록번호 : 220-87-95188
-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길 16, 4층

☐ ◇◇◇◇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69.9.14.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7581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34, 304동 1602호

☐ ◆◆◆◆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80.4.3.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10583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50, 111동 2203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다.

※ 지정제외점수 10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오리엔트전자(이하 ‘회사’)의 제25기(‘15.1.1.~‘15.12.31.)부터 제32기(‘22.1.1.~‘22.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5년 2,582백만원, ‘16년 4,500백만원, ‘17년 5,043백만원, ‘18년 △5,043백만원)

- 회사는 ‘15년부터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발생하였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크게 미달하여 손상차손을 매년 인식했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다가 ‘18년도에 일시에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장·단기대여금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19년 441백만원)

- 회사가 장·단기대여금의 공정가치 평가 시 차입자인 (주)오리엔트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하여 장·단기대여금의 공정가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절차 소홀

(‘15년 8,884백만원, ‘16년 9,017백만원, ‘17년 5,472백만원)

-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주)오리엔트시계와 (주)오리엔트비나를 종속기업으로 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도
-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19년 773백만원)

- 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인 (주)오리엔트시계를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평가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 지분법 적용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계감사기준」 200, 500 등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등록취소,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8, 9, 12, 18, 59, 60

-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4)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 (5)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6)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희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 (7)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에서는 회수가능액의 측정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1.1, B5.1.1, 2

-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예: 비슷한 대여금의 시장이자율이 8%일 때 5%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미리 수수료를 받는다면, 대여금은 공정가치(수취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순액)로 인식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문단 9, 60, B4

-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거래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 (1) 그러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한 거래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표시 문단 14

-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4

-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4(1)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 (1)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2) 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3) 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4)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19, B86

-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연결재무제표는:
 - (1) 지배기업과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한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붙임)

관계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 4. <생략>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

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 ⑦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별표 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 ~ 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 ~ 20. <생 략>

[별표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4항 관련)

1. ~ 3. <생 략>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5. ~ 14. <생 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 6. <생 략>

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②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 ⑬ <생 략>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 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

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7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 제3항제7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1. ~ 14. <생략>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

1. 기준금액

-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4 이상 ~ 2.6 미만	15%	350%
2.2 이상 ~ 2.4 미만	12.5%	300%
2.0 이상 ~ 2.2 미만	10%	250%
1.8 이상 ~ 2.0 미만	7.5%	200%
1.6 이상 ~ 1.8 미만	5%	150%
1.4 이상 ~ 1.6 미만	3.5%	100%
1.4 미만	2%	50%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다만,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규모 항목은 합산하지 않는다)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다.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 회사와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의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회사 : 위법행위별로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이 경우 위법행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2)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 : 위법행위별 중요도 점수를 회사의 위법행위별 기준금액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단일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

라.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이 복수이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감사절차 위반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중요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산정한다.

중요도		항목	가중치	상(上, 3점)	중(中, 2점)
위법행위	회사 및 회사 관계자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중요도		가중치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 정도	위반 규모	0.2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 유형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회사·회사 관계자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위법행위의 중요도 산정시 항목별 중요도가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4) 또는 5)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 3)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본과징금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감사인 및 회사관계자의 경우 100분의 250)을 차감한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 4)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 1) 별표 7의 제3호나목1)부터 3)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9)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가.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과징금이 산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산정액(제3호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동일한 사유(동일한 사유에 영향을 미친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적은 경우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라. 회사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 외부감사 불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권 발행제

한의 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1)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2) 당기(반기, 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3)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 미만인 경우
- 다.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바.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5.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감면

-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나.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 3)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

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제8조의2제1항,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 <생략>

II. 일반원칙

2. <생략>

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규모금액을 산정한다.

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그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도를 계산할 때 각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4배 상향하여 적용한다.

- 1) 누락 또는 잘못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주요 재무정보가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통해 파악(피투자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거나 투자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에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등)되지 않는 경우
 - 2)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 관리종목 지정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3) 연결 범위 결정 첫 해에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적자반전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 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V.2.에 의해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이라도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금액이 대상 회사 재무제표의 단순합산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에 따라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내부거래금액의 비중에 따른 감경

비중*	감경
40% 이상	-
10% 이상 ~ 40% 미만	1단계
10% 미만	2단계

* MAX = [자산비중, 부채비중, 매출액비중, 매출원가비중]

- 차.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함에 따라 중요도가 최소 조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감경시 최소조치’를 부과한다.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및 면제

2. <생략>

-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확정된 재무제표 공시일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

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1)과 같다.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1)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감사인인 회사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일자'로 보되 동 기재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의2. <생략>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생략>
- ③ ~ ⑦ <생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 <생략>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 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 제>

-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 ② <생 략>

-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 9. <생 략>
- ④ ~ ⑥ <생 략>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 략>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 가. <생 략>

나. 법 제42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적 위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여,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 마. <생략>

1의2. <삭제>

2.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② ~ ④ <생략>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 3. <생 략>

*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 ~ 4. <생 략>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 다. <생 략>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6. ~ 7. <생 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12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후략)

4.26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4.27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2)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3)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4.27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한다. (후략)

4.31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되며, (중략) 경영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의제 의무'라고 불린다.

4.39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의무는 다음의 예를 포함한다.

(1) 현금을 지급할 의무

□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26 퇴직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1)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61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 의무도 회계처리를 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 비공식적 관행으로 의제 의무가 생긴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 예에 해당한다.

62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라 기업이 그 제도에 따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어도, 기업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려고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도에 따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현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반증이 없다면 그 약속은 종업원의 잔여근무기간에 계속 유효하다고 가정하여 퇴직급여의 회계처리를 한다.

□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5)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6)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희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7)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에서는 회수가능액의 측정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60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4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나)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다)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라)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5.1.1A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B5.1.1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B5.1.2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예: 비슷한 대여금의 시장이자율이 8%일 때 5%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미리 수수료를 받는다면, 대여금은 공정가치(수취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순액)로 인식한다.

□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9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60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4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거래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1) 그러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한 거래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4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4(1)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1)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2) 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3) 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4)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감리2국
연 락 처	02-2100-2693	02-3145-7306